



주간통일정세 2011-15(2011.04.04~04.1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1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용삼 前철도상 처형…룡천역 폭발 관련(4/4,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김용삼 전 철도상이 처형된 것이 맞고 룡천역 폭발 사고와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고, 화폐개혁 실패로 처형설이 나온 문일봉 전 재정상에 대해서도 “처형됐을 개연성이 있고 당국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7월 철도국의 전시예비용 기관차들이 못쓰게 되면서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이었던 2008년의 9.9절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자 당국이 2009년 3월 김 전 철도상을 처형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탈북자 ‘적대계급’ 간주…北가족 강제이주(4/5, 자유아시아방송(RFA); 데일리NK)**
 - RFA는 북한이 외부소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탈북자를 ‘적대계급’으로 규정하고 그 가족을 산골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탈북자의 가족으로 드러나면 산골로 추방되고 있으며, 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탈북자 가족에 대한 박해가 한층 심해졌다고 전함
 - 대북매체 데일리NK는 전날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느라 접촉하면서 중동의 민주화 사태와 같은 외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강제이주가 단행되고 있다고 보도
 - 매체는 보안원에게 직접 들었다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주 대상 명단에 양강도만 1천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며 “김정은이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들의 가족과 혁명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전함.
 - 소식통은 또한 “탈북 가족들이 남한의 가족에게서 돈을 송금받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소식, 특히 리비아 사태 같은 소식들이 흘러들고 있다고 판단해 나라에서 전격적으로 이주 정책을 단행한 것 같다”고 전함.

- **北 태양절 앞두고 김일성 우상화 주력(4/6, 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자 북한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15일)을 앞두고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가 한창
 - 3월 초부터 북한은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과 그 주변을 손보느라 분주한데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황해북도



에서 향나무를 비롯한 6천여그루의 나무와 6천여㎡에 심을 수 있는 금잔디를 기념궁전으로 보내 조경에 보태는 등 전국 각지에서 속속 지원 물자를 보내고 있으며 각지의 근로자와 청소년, 군인들이 기념궁전 앞으로 주변을 김일성화(花)로 장식하는 데 동원되고 있음.

- 조선노동당출판사를 비롯한 출판사들은 김 주석의 업적을 나열한 기념도서 자주위업의 위대한수령'과 '위인의 식견' 등을 줄줄이 출간하고 있으며 북한은 김 주석이 생전에 발표한 글을 전시하는 주체사상노작 전시관에 올해 들어 3만 명이 다녀가며 김 주석의 업적을 되새기고 있고 김 주석이 내놓은 노작이 1만 여건이나 된다고 선전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은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과 같은 문구를 자주 언급하면서 김 주석에게서 시작된 백두혈동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기념'이라는 문구와 김일성화(花)를 새겨 넣은 새 우표를 발행했으며, 또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 등에 재직하는 교원에게 교수, 부교수의 학직을 수여하거나 박사학위를 주면서 태양절을 기념한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일 부자, 자강도 기업소 현지지도(4/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최고인민회의 제12기4차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자강도 제련소와 압록강다이아(타이어)공장 등을 현지지도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지만 김 위원장의 정확한 현지지도 일시를 명시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자강도 제련소를 방문해 전기로, 액체산소불리장 등을 둘러보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유색금속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련소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고 능력확장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 든든하고 질긴 다이아를 생산해 압록강 다이아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정은 외에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 당 비서, 주영식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

● 김정일 부자, 자강도서 예술공연 관람(4/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강도예술단 예술인 공연을 관람했다고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자강도예술단은 김정은 찬양가인 합창 '발걸음'을 비롯해 합창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자강도



는 내나라의 자랑도일세’ 등을 무대에 펼쳤고,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강도예술단은 지난 기간 혁명적인 예술 창조활동을 힘있게 벌여 도내 당원과 근로자들이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

- 공연장에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태종수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주영식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수행했고 강계 시내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꾼과 선군시대의 공로자, 노력 혁신자들도 공연을 관람

● **北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언급 없이 마쳐(4/8, 연합뉴스)**

- 북한은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를 열었지만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를 마쳤으며 주상성 전 부장의 해임으로 공석인 인민보안부장에 리명수 국방위원회 행정국장을 선임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전함.
- 이번 회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으나 자강도에서 공장 현지도와 예술공연 관람을 한 것으로 전날 보도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됨.
- 회의에서는 또 북한 군수산업을 전담해온 전병호 국방위원을 해임하고 후임 위원에 박도춘 당 비서를 선임했으며, 리태남 부총리를 ‘신병관계’를 이유로 해임하고 법제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규 최고검찰소장을 앉힘.
- 박수길 부총리 겸 재정상은 예결산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이 101.3%로 초과 수행됐고 국가예산지출은 99.9%로 집행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국가예산수입은 107.5%, 국가예산지출은 108.9%로 늘리게 된다”고 밝혔으며 국방비는 작년과 같은 15.8%로 책정하고 주요 예산지출 부문이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기본건설 자금지출 항목이 새로 추가됨.
- 통일부는 북한의 올해 예산을 5천677억 원(미화 57억3천만 달러)으로, 국방비는 879억 원(9억 달러)으로 추산

● **최고인민회의 불참 김정일 강계서 현지도(4/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등 강계시 산업시설을 현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현지도 일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공장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개조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제품의 정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그는 이어 강계고려약공장을 방문해 약초조직배양실 등을 살펴보고 “고려약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원료를 충분히 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각종 야생약초를 모조리 수집하는 동시에 약초재배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자강도내 공장·기업소(자강도제련소, 압록강다이야공장) 현지지도(4.6, 중방)
- 김정일,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 관람(4.6, 중통)
- 김정일, 강계시 공장들(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강계고려약공장) 현지지도(4.7, 중통)

나. 경제

● 北, 석탄·철 對中수출 벌써 1억달러 돌파(4/5,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확인한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2월 중국에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대폭 늘어나 1억 달러를 돌파
- 북한은 2월까지 중국에 석탄 7천749만 달러(83만t), 철광석은 2천 297만 달러(20만t)를 수출해 총 1억46만 달러를 벌어들여 석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만 달러(49만6천t)와 비교하면 금액면에서 29배, 철광석은 작년 동기(14만t)의 2.2배에 달하는 것

● 中-北 교역 거점 투먼-훈춘 고속도로 개통(4/5, 연합뉴스)

- 두만강 유역의 중국-북한 교역 거점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과 훈춘(琿春)을 잇는 고속도로가 정식 개통했다고 연변일보가 보도
- 4억6천만 위안(5천770억 원)을 들여 3년여 만에 완공한 이 고속도로는 지난해 9월 완공돼 시험 운영을 거쳐 지난달 23일 정식 개통했으며 길이 62.7km인 이 고속도로는 투먼-훈춘을 40분 만에 주파
- 중국은 라진항과 청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지난 1월 라진항을 거쳐 훈춘의 석탄을 처음으로 상하이로 운송했고 투먼-청진 해상 항로도 올해 개통할 계획
- 중국은 또 지난해 10월 투먼에 신분증만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1인당 8천 위안(134만 원) 이하의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호시(互市)무역 시장을 개설했으며 이 일대에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건설을 추진하는 등 투먼과 훈춘을 거점으로 한 북한과 경제 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음.



- **北 올해 예산 57억 달러…건설 주력(4/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통일부와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올해 예산지출액으로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5천677억 원(북한 원 기준. 미화 57억3천만 달러)을 편성
 - 작년과 비교해 보면 북한은 기본건설 부문의 지출을 15% 늘리기로 해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과 희천발전소 건설 등 강성대국 진입의 성과로 내세울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한 경공업 부문에 12.9%, 농업 부문에 9%, 4대 선행부문(석탄·전력·금속·철도)과 기초공업 부문에 13.5%씩 늘어난 예산을 쓰기로 해 경공업과 농업을 강조한 신년공동사설의 기초를 반영
 - 예산 증가폭으로만 보면 기본건설 부문이 가장 컸으며 국방비에는 작년과 같이 총액 대비 15.8%가 책정
 - 최고인민회의 발표로 보면 2010년 예산수입은 5천283억 원으로 당시 환율로 52억 달러 정도였고 지출은 5천210억 원(51억3천만 달러)이어서 73억 원의 재정 흑자를 본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
 - 최영림 내각총리는 보고에서 “지난해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데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온 것”이라며 “올해를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고 알곡생산목표 점령과 인민소비품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을 피력
 - 또 “내각은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해 수출액을 결정적으로 장성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조선의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기술협조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북중경협 강화를 시사

- **中, 훈춘-라진항 도로보수공사 연내 완공(4/10, 연합뉴스)**
 - 훈춘 소식통들에 따르면 훈춘시는 중국의 건설업체와 북한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라진항 도로 건설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지난 2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시공업체는 이달 중 이 구간 도로 보수 공사에 착수,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
 - 원정리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훈춘 취안허(圈河) 통상구와 마주 보는 북한 지역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훈춘-원정리-라진 접근성이 개선돼 두만강 유역의 물자를 남방으로 운송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

■ 기타 (대내 경제)

- 北, '라선경제무역지대'가 “국제 화물중계지·수출품가공지·국제적인 금융 및 관광지로 꾸러지게 될 것” 再次 강조(4.6, 중통)



다. 군사

● 北, 동.서해 잠수함 기동훈련 강화(4/6,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동.서해 안 해군기지에서 신형 상어급 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5~6척씩을 동원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3월에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소식통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군기지에 배치된 신형 상어급 잠수함까지 훈련에 투입한 것은 작전 배치된 잠수함의 성능을 시험하는 한편 잠항 지속 능력을 보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함.
-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이 해빙기를 맞아 동.서해 해상 침투세력의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으나 침투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북한은 길이 35m 상어급(325t)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길이 40m 규모의 신형 상어급 잠수함(K-300)을 건조해 작전 배치

● 北 황남·평남에 새 군사시설(4/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해 7월에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연평도에서 약 29km 떨어진 황해남도 강령군 지역에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축물을 공사중”이라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평안남도 등지에 군용으로 보이는 시설을 건축하고 있다고 RFA가 보도
- 2만1천여㎡ 규모의 부지에 건물 세 개가 완공된 상태로, 북동쪽에는 새 도로가 났고 바다와 면한 서쪽으로는 부두 공사도 진행 중이며, 항구 시설은 고압전류가 흐를 것으로 추정되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
- 방송은 또 지난해 9월 찍힌 위성사진에서도 평남 증산군 금산리에 공군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함.

● 北리영호 “전쟁도발책동 수수방관 않을 것”(4/8, 연합뉴스)

- 북한 리영호 총참모장은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8주년 중앙보고대회 연설에서 “지금 미제와 남조선 괴뢰는 북남 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등을 돌리고 북침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핵전쟁연습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국방사업은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 중대사이고 국방력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인민군 장병은 구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 선군혁명의 주력군답게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주요 전구마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적 본보기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방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을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 방식으로 풀어나가 국방위주의 우리식 국가기구체계의 위력을 발양시켜야 한다”고 말해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을 확인

● 北 10년간 무기구매 5억 달러 육박(4/8, 연합뉴스)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99년 러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 9천만 달러 상당의 헬기와 전차엔진 등을, 2000년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억1천만 달러 규모의 항공기 부품과 레이더 등을 구입해 지속되는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부터 10년간 해외에서 4억7천500만 달러 상당의 무기 및 무기 부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또 2001년에는 러시아 등 6개국으로부터 헬기, 군용트럭 등 1억3천만 달러 어치, 2002년에는 슬로바키아 등 11개국으로부터 헬기부품, 통신장비 등 6천300만 달러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10년간 전체 무기 수입액의 82.7%(3억9천300만 달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사이에 집중됨.
- 이후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해외 무기·무기부품 수입액은 연 800만~2천800만 달러 수준

라. 사회·문화

● 北도 日원전 공포(?)…방사성 영향 소개(4/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방사선과 그것이 인체에 주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과학기술상식’ 코너 방송을 통해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 문제를 환기시키며 방사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냄.
- TV는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이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이 날로 확대돼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
- 프로그램은 방사선의 투과력이 강하다면서 “한번에 1Sv(지버트) 이상의 쏘임을 받으면 정신적 불안,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고 양이 더 커짐에 따라 피해증상이 뚜렷해진다”며 백혈병과 악성종양, 재생장애성 빈혈, 불임 등을 비롯해 기형아 출산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
- 그러나 “이렇게 센 방사선 쏘임은 원자탄 폭발이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있을 수 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생활 과정에 자연환경으로부터 1년 동안 평균 2.4mSv의 방사선 쏘임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고 이런 크기는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며 불안감 확산을 경계하기도 함.



● **북한, NGO에 ‘北주민 인터넷 사용 금지’ 통보(4/5, 아사히신문;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북한에서 활동하는 외국 비정부기구(NGO)에 “주민이 인터넷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지만 이러한 요구를 받은 NGO 이름은 언급되지 않음.
- 북한 당국은 또 외국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최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약 4만6천명이 직장에서 개성시로 돌아갈 때 신체검사를 하고 주말에 시행하는 학습회 내용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청년조직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강력히 통제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등록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DVD와 USB 메모리 등을 단속하고 있음.

● **기상청 “北 지난달 극심한 가뭄 겪어”(4/5, 연합뉴스)**

- 지난달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4.8mm로 평년(26.7mm)의 18%에 그쳤고 평균기온은 0.8℃로 평년(1.2℃)과 비슷했으며 북한의 지난달 강수량은 기상청이 관측 자료를 보유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기상청이 밝힘.
-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19일과 27~28일 북한지역에 비와 눈이 내렸으나 강수량이 많지 않았다”면서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TV “평양 등 방사성 물질 검출…인체영향 없어”(4/5, 조선중앙TV)**

- 기상수문국의 심명옥 중앙기상연구소 부소장은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평양과 원산, 청진 등에 있는 방사능 감시소에서 지난 시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요오드와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힘.
- 심 부소장은 “그런데 그 양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히 적은 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검출량은 언급하지 않음.
- 그는 “늦은 봄철과 이른 여름철에 우리나라 기후에서 특징적인 것은 조선 동해 북부에 고기압이 놓이면서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에 냉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런 냉해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동풍이 지속적으로 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방사성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
- 방송은 또한 남한의 방송보도를 인용,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앞으로 동풍을 타고 7일경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7일에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방사성 입자가 빗물에 씻겨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 수치는 낮을 것으로 보지만 비를 직접 맞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



- 4월 평양에 빙수판매대…北 각종 ‘별미’ 제공(4/6, 평양방송; 조선신보)
 - 북한의 대외매체인 평양방송은 “평양시 중구역을 비롯한 일부 구역 도로에는 이미 빙수 판매대가 모습을 드러내 수도(평양) 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며 “시 인민위원회가 해당 공장과 긴밀히 연계(협조)해 위생안정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얼음을 깎는 능력이 큰(뛰어난) 서리꽃 상표를 단 100대의 빙수기계를 제작·완성했다”고 전함.
 - 방송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자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4.15)을 앞두고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빙수 판매대 100개를 세우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
 -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해 4월 태양절을 앞두고 열린 ‘4월의 명절료리축전’을 소개하면서 “옥류관에서 철갑상어, 자라요리를 비롯한 고급요리 봉사(판매)를 시작했고 피자, 스파게티, 풍두, 로슈티(스위스식 감자 부침개)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함.
 - 신문은 또 옥류관 부속 ‘요리전문식당’이 작년 10월 문을 연 뒤 자라, 연어, 철갑상어, 메추리같이 특색 있는 재료로 만든 별미요리와 스파게티, 피자를 판매하고 있다고 전함.

2. 대외정세

- 北, 교전국 美에 평화담판 요구(4/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조선이 준비하는 통이 큰 대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이 통이 큰 대화를 통해 현안을 일괄타결하려는 것이 군대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힌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며 “서해 포격전이 마지막 무력충돌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 조선(북)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담보로 해 교전국인 미국에 평화담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 김일단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과 군부호전광들은 더 이상 두 사건(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을 등대고 무모한 반공화국 광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대화를 해도 통이 큰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해도 진짜 전쟁맛이 나는 전쟁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군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신문은 “작년 11월에 일어난 서해포격전으로 유관국들은 대화외교의 재개를 모색하게 됐다. 미국에서는 조선의 핵개발능력과 탄도미사일의 성능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소리로 오르게 됐다”며 “미국은 6자회담에 앞서 북남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남측이 반대해도 조선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주장
 - 신문은 또한 “현재 정세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남조선 당



국"이라며 "북남, 조미의 현황은 대조적 양상을 띠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택을 그르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

● 김계관, 캠벨, 中동시 방문…북핵 협의(4/7,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활주로에서 중국 외교부 측이 제공한 차량 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가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부상이 주중 북한 대사관이 아닌 중국 외교부 차량을 이용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일단 중국 측 6자회담 카운트 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오찬을 겸한 북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됨.
- 김 부상의 이번 방중은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이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중·러 회담을, 같은 달 11~14일 평양에서 북·러 외무부간 정례 협의회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조건과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등을 논의하고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됨.
- 또한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확인해준 뒤 "중미 양국은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캠벨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 다방면의 北-美 접촉(北 경제대표단 訪美, 비공식 토론회, '카터' 前 대통령 訪北 예정 등)은 "北-美 공식대화 재개를 대비한 작업"이라고 강조 및 "北의 '통이 큰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 일괄타결 입장 불변" 대변과 남측에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양자택일" 촉구(4.6, 조선신보)

3. 대남정세

● 백두산화산 2차 회의 12일 개성개최(4/7,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11시께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지진 국장 명의로 우리 측 기상청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오에 따라 백두산 화산 남북 전문가 회의를 12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의에 대해 북측이 동의했다고 밝힘.
- 정부는 앞서 6일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 단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12일 개성에서 2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한바 있음.
- 북측의 제안으로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남북은 백



두산 화산과 관련한 공동연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함.

● 北 “금강산 관광 현대 독점권 취소”(4/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며 “우리는 현대 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현대 측에 통고하고 그에 대한 공식 문건을 정식 넘겨줬다”고 말함.
- 아태평화위 측은 금강산 사무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현대 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북측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 취소 발표에 대해 “당혹스럽다. 최대한 빨리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함.
- 대변인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기했다”며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해당한 국가적 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그는 또한 “우리는 현대 측과의 신의를 지켜 현대를 비롯한 남측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금강산 관광을 희망하는 남녘 동포들의 염원까지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보기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성 있게 노력했다”며 “그러나 현대 측과의 협상도 남조선 당국의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끝내 결실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
-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만큼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의 조치가 있어야 재개될 수 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풀릴 듯 안 풀리는 북핵.. 출구 없는 기 싸움>(4/4)

- 봄기운을 타는 듯 하던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교착의 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6자회담 재개 흐름은 북한 UEP(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를 둘러싼 외교전에 발목이 잡혀있고, 남북관계에 희미하게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해빙을 기대하기는 아직 일러 보임.
- 이 때문에 북핵 외교가에서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의미)”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음. 이 같은 기류는 그간 정세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주목받아온 대북 식량지원 논의가 이렇다 할 ‘모멘텀’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주민 610만 명에게 43만t의 식량을 긴급 지원하라고 공식 권고했으나 주요국들의 반응은 예상 밖의 신중함으로 나타났음. WFP가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항목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요전문가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는 어느 국가도 ‘의미 있는 규모’의 식량지원에 선뜻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무언의 컨센서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임.
- 특히 대북 식량지원의 적극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였던 워싱턴의 기류가 ‘미온적’으로 돌아선 것이 국제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이는 미국 의회 내에서 다시금 고개를 드는 대북 강경론과 맞물리면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운신 폭을 가일층 좁혀놓고 있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지난 1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것은 미국 의회 내부의 기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임.
-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흐름이나 북미관계에 영향을 주는 ‘규모’와 ‘속도’를 가진 대북 식량지원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임. 물론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해내기 위한 수단인 만큼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유리함.
- 오바마 행정부와 견고한 대북공조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는 최근 들어 가일층 ‘원칙론’으로 회귀하고 있음. 이 같은 정체(停滯) 흐름 속에서 6자회담으로 나아가는 길목의 최대 쟁점인 북한 UEP 대응을 둘러싼 외교적 대치는 좀처럼 접점을 찾



- 지 못하고 있음.
- UEP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려는 한·미와 6자회담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지는 북·중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임. 지난 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이 같은 출구 없는 대치구도를 여실히 보여준 무대였음.
 - 주목할 변수는 4월이 되면서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이 중국에서 친미성향의 콜롬비아로 바뀐 점임. 한·미가 UEP 대응논의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 셈임. 더욱이 5월이 되면 UEP 문제에 강경한 프랑스가 의장국이 됨. 이에 따라 한·미가 UEP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전방위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외교적 압박감과 부담 속에서도 UEP 대응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임. 북한과의 특수 관계와 한반도 상황안정을 꾀하려는 특유의 전략적 관점 속에서 '항로'를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임.
 - 이는 앞으로 UEP를 둘러싼 외교적 줄다리기가 더욱 격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교착국면을 흔들 정세의 유동적 흐름은 얼마든지 조성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가장 결정적인 키는 북한이 쥐고 있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과 같은 '비핵화 성의'를 표할 경우 상황이 의외로 쉽게 풀려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특히 6자회담 관련국과 유엔 안보리 주변에서는 IAEA를 통해 북한 UEP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유력한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어 일정한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와 맞물려 대북 식량지원 논의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임. 표면적으로는 분리된 이슈이지만 대규모 식량지원과 비핵화 조치는 내용상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임. 미국은 현재 북한 식량사정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운의 방중이나 지미 카터 전(前) 미국대통령 일행의 이달말 평양 방문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그에 따른 정세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北김계관 방중..6자재개 돌파구 열리나>(4/07)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7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착상태에 놓인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됨.
 - 김 부상의 방중 일정과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6자회담 및 북한 우리농축 프로그램(UEP)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부상의 방중은 현시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음. 6자회담 재개 조건과 수순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적 대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중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임.
- 북한 UEP 대응과 회담재개 전제조건을 놓고 한·미와 가파른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북·중이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의 키를 조율해나가는지가 정세흐름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점쳐짐.
- 이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중과 맞물리면서 베이징을 무대로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해법을 놓고 '간접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우선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중국의 '중재역'임. 김 부상의 이번 방중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재개를 위한 중재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설득해낼 지가 관전 포인트임. 중국은 최근 한·미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을 토대로 북한의 반응을 타진해보고 일정한 '성의표시'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임. 일각에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카드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은 이미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대표 간 회담에서 한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며 이날 방중 한 캠벨 차관보로부터는 미국의 입장을 청취했음.
-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 UEP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이 필요하고 북한이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임.
-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캠벨 차관보와 김 부상의 베이징 회담 성사 가능성임. 한국과 미국은 북미 간 양자접촉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는 만큼 캠벨 차관보와 김 부상의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캠벨 차관보와 김 부상이 베이징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옴. 특히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김 부상이 이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을 방문했다면 모종의 '시급한 현안'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해 보임.
- 만일 베이징을 무대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경우 6자회담 재개흐름은 급속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특히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끌어낼 수도 있어 대화국면이 속도를 낼 가능성



- 도 있어 보임.
- 외교소식통은 “김계관 부상의 방중은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6자회담 재개 국면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현 대화국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 UEP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명확한 성격규정 없이 6자회담 재개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안보리에서 다시 UEP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여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유감 표명과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대화국면의 여건조성이 여의치 않은 형국임.
-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후계구도를 더욱 공고화한 뒤 대외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지만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만약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경우 장기간 6자회담 재개나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美 “캠벨, 김계관 안 만났다”(4/08)

- 미국 국무부는 7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동시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미·북 직·간접 접촉설을 일축했음.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문에 “캠벨 차관보는 중국에서 어떤 북한 관리들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캠벨 차관보는 다가오는 미·중 전략경제대화 준비를 위해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러 베이징에 간 것”이라면서 “캠벨 차관보는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캠벨 차관보와 김 부상이 이날 동시에 중국을 방문한 점을 들어 이들의 직접 접촉이나 중국을 매개로 한 간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만나지 않았다고 확인했음. 그는 두 사람이 동시에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동시에 방문하려고 우리 측에서 시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미국은 북한의 선(先) 남북관계 진전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美대사 “北문제 해결, 다자간협력 중요”(4/8)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8일 “북한에 핵무기 개발 이외에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는 북한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느냐에 달렸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 등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독특한 관계라는 것은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미중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이날 “1990년대 초반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은 숨 가쁘게 남북관계 진전을 이뤘지만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지난 20년은 공백상태”라며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자 강성대국 완성의 해인 2012년 북한에 남북 기본합의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뤘던 김일성 주석 때로 돌아가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분궤도’로 돌아올 방법은 김일성 주석과 같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북한은 20년 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남북관계의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의했다.
-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정상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2~3월 북측과 만나 북한이 6자회담 참가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제재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요구를 포기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준비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이날 행사에는 6자회담에 참가하는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으며 장신썸(張鑫森) 주한 중국대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나. 미·북 관계

● 카터 전 美대통령, 26~28일 방북 (4/4)

-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28일 2박3일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일행과 함께 이 기간에 방북해 북한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을 찾아



당시 김일성 주석과의 회동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 극단적 대결 분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돌리는 평화 메신저 역할을 한 바 있고 지난해 8월에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석방을 위해 방북했었음.

- 카터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방북에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음. 따라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 면담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일각에서는 고비 때마다 대화의 물꼬를 터온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교착된 남북 대화와 북핵 6자회담의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그러나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미 행정부 측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사적인 자격으로,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도 갖고 가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음.
- 실제 서방의 리비아 공격이라는 초유의 중동 대 격변 속에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임기 후반 대외정책이 온통 중동에 쏠려 있고 최근 국무부 내의 2인자로 대북통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물러난 점으로 미뤄볼 때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등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 회원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남북 대화와 북핵 6자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통해 적어도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와 정세 전환의 가능성을 판단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美의원들 “北-미얀마 핵·군사협력 조사해야”(4/9)

- 북한과 미얀마 간 핵·군사 협력 실태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8일(현지시각) 촉구했음.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제임스 인호프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음.
- 이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미얀마에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고 미얀마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양국 간 협력 실태와 미얀마 내 인권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주도하고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루거 의원은 “북한에서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로 넘어간 군사 장비·기술의 범위와 세부 내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 스티븐스 美대사 “북한과의 대화 위해 여러 노력”(4/10)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접촉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1~2개월 내에 좋은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9일 전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과 80분간 단독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2~3개월 후 다시 만날 때 좀 더 진전된 성과를 놓고 이야기하자”며 “그 때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매우 좌절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소개했다.
- 그는 또 “미국은 과거 북·미 간에 진행해온 ‘살라미 협상’(하나의 카드를 여러 개로 나눠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북 대화에 대한 틀과 격식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자 “한국 정부의 입장을 ‘회의적’(skeptical)으로만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 지난 2월 북한이 제안했던 남북국회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선 “흥미롭고 좋은 아이디어”라며 “추후 논의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와 1만2천여 개의 미사용 연료봉의 해외 반출 문제, 쌀 지원 문제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스티븐스 대사는 6자 회담 당사국으로서 북한, 중국 등과 적극 대화에 나서달라는 주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직수반 3인 카터 訪北 동행..화려한 면면>(4/10)

- 10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 회원인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과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외에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도 동행할 예정이다.
- 아티사리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물로 지난 30여년 동안 코소보 사태를 비롯해 세계 각지의 가장 풀기 힘든 외교적 난제들만을 상대해온 독심 있는 ‘해결사’로 평평이 나 있음. 2000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아일랜드공화군의 무장해제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고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 반군간



평화중재자로 나서 30년간 이어온 유혈사태를 종식했음. 2007년에 도 이라크의 수니파와 시아파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밀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국제분쟁의 해결사로 불리기도 했음.

- 로빈슨 전 대통령과 브룬트란트 전 총리는 세계적 여성지도자들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990년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로빈슨 전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직을 마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직을 지내며 '세계인권의 파수꾼'으로 활동해왔음. 브룬트란트 전 총리는 1990년 노르웨이 사상 첫 여성총리로 임명된 뒤 6년간에 걸쳐 총리직을 지내며 이어 1998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선출됐음.
- 이처럼 전직 국가수반 4명이 대거 방북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한 외교소식통은 "작년 8월말 방북 때는 카터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면담이 불발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경우가 달라 보인다"며 "전직 국가수반 4명이 동시에 방문하는 만큼 김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일정을 마치고 난 뒤 29일 서울에 들러 우리 정부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통해 과거 외교적 성과를 재연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과거와는 상황과 여건이 달라 국면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음.

● 엘더스그룹 “한반도 긴장완화.北식량 논의”(4/10)

- 이달 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속한 전직 국가수반급 모임인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은 9일 방북 추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식량문제 등을 방북 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엘더스 그룹은 이날 자료를 통해 “엘더스 그룹은 한반도의 고조된 긴장과 북한의 임박한 식량부족 사태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이 그룹은 “어떻게 하면 이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를 당국자 등과 논의하기 위해 엘더스 그룹의 소규모 인원이 4월말 이 지역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하지만 엘더스 그룹은 방문 계획이 최종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면서 더 이상의 설명은 내놓지 않았음.

다. 중·북 관계

● 北, 석탄·철 對中수출 벌써 1억 달러 돌파(4/5)

- 북한이 올해 1~2월 중국에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어나 1억 달러를 돌파했음. 5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월까지 중국에 석탄 7천749만



달러(83만t), 철광석은 2천297만 달러(20만t)를 수출해 총 1억46만 달러를 벌어들였음.

- 석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만 달러(49만6천t)와 비교하면 금액면에서 29배, 철광석은 작년 동기(14만t)의 2.2배에 달하는 것임.
- 북한은 만성적인 외화부족을 해결하려고 작년 하반기 이후 주요 에너지 자원인 석탄은 물론 철광석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中연변, 단체관광 허용이후 北관광 급증(4/5)

-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 단체관광을 허용한 이후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에서 북한을 다녀오는 관광객이 급증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5일 보도했음.
- 방송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4월 북한을 단체관광 대상 국가로 지정한 이후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연변후일국제여행사를 통해 평양 관광에 나선 중국인이 1천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 이 여행사는 “이달 들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다”며 “대규모 단체 관광 신청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음.
- 이 여행사는 2006년부터 북한 변경관광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해 라진과 선봉, 청진 등 북한 변경지역을 다녀온 관광객이 3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소개했음. 변경관광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신원만 확인되면 간단한 수속을 거쳐 1~2일 코스로 인접 국가를 관광하는 것임.
- 연변에서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띠는 것은 북한 단체관광 허용 이후 변경관광뿐 아니라 평양 코스 등 북한 관광 상품이 다양화된 데다 지난해 7월 외지인에 대한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도 5년 만에 재개됐기 때문임.
- 연변 공안국 통계에 따르면 연길(延吉)과 훈춘(琿春), 용정(龍井), 화룡(和龍) 등 연변 4개 도시에서 외지인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을 재개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북한 변경을 관광한 외지인이 3천 명을 넘어섰음.
- 연변 공안국은 북한관광에 나서는 중국인들의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05년부터 현지인에게만 변경관광 통행증을 발급해 왔음. 북한 조선관광사 연길대표처도 지난해 4월부터 연길에서 북한 관광 비자 발급을 시작,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 동북 3성에서는 선양(瀋陽) 북한총영사관에서만 비자를 발급해왔음.

● 김계관 “2월 약속에 따라 방중 했다”(4/7)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지난 2월 약속한 대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방중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상은 이날 저녁 베이징(北京) 소재 국제구락부로 들어가다가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갑작스럽게 방중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음. 그의 이런 대답은 ‘예정된’ 방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임.

- 김 부상에 앞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이 국제구락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이로 미뤄 양 부장이 김 부상에게 만찬을 베풀 것으로 추정됨.
- 김 부상은 곧바로 외교부로 향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상의 이번 방중에는 북한 외무성 미국국 소속 인사들이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런 가운데 이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미국·북한·중국 3자 접촉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북미 간 직·간접 접촉은 결국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캠벨 차관보는 조만간 열릴 미·중 전략대화를 위한 사전 의제조율 차원에서 방중 했으며 중국 측과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김정은, ‘4말 5초’ 방중 가능성 부상(4/8)

- 북한의 2인자 격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4월말 또는 5월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음.
-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 8일 “중국과 북한 주요 지도자들의 내부 일정으로 볼 때 4월 말과 5월 초가 가장 적절한 시기로 관측 된다”고 밝혔다.
- 실제 북한 김정은으로서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가 7일 개최됐고 이달 15일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거치면 사실상 주요 일정을 마치게 됨.
- 아울러 중국 역시 12~14일 브릭스 정상회담과 14~16일 보아오 포럼이 종료되고 내달 1일 노동절 휴일을 제외하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의 중국 지도자들에게도 참석해야 할 큰 행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작년 9월 28일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서 전면에 나섰다”면서 “그런 이후 방중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외교’ 활동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중국은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이 지난해 10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같은 해 12월 초, 멩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公安부장이 지난 2월 13~15일 방북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해 중국 지도부의 김정은 방중 요청을 전했고 양측이 시기만 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특히 멩 국무위원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동지께



- 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면서 북한의 권력 승계를 공식화한 데 고무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방중하게 되면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형식이 아닌 단독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미 김정일 위원장과 동시에 산업시설 시찰, 외국인사 접견, 공연관람, 군부대 시찰 등으로 공동통치를 전면화한 김정은이 단독 방중을 통해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포함한 주요 지도자들을 면담함으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위상을 국제사회에 보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우려해 김정은이 방중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中, 훈춘-라진항 도로보수공사 연내 완공(4/10)

- 중국이 훈춘(琿春)과 라진항을 잇는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연내 완공하기로 하는 등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 10일 훈춘 소식통들에 따르면 훈춘시는 중국의 건설업체와 북한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라진항 도로 건설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지난 2일 체결했음. 이에 따라 시공업체는 이달 중 이 구간 도로 보수 공사에 착수,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원정리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훈춘 취안허(圈河) 통상구와 마주보는 북한 지역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훈춘-원정리-라진 접근성이 개선돼 두만강 유역의 물자를 남방으로 운송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됨.
- 이 도로는 원정리에서 청계와 선봉을 거쳐 라진항과 연결되는 총 길이 53.5km의 구간으로, 선봉-라진까지 17km는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지만 원정리-선봉 간 36.5km는 비포장도로여서 물자 운송이 더뎠음. 훈춘시는 비포장 구간을 포장하고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을 보수해 차량운행 속도를 평균 시속 40km로 끌어올릴 계획임.
- 중국은 2008년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원정리-라진항 구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약속했으나 통행료 수익금 분배와 건설 노선 등을 둘러싸고 북한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이에 따라 중국은 우선 기존 원정리-라진항 도로를 보수,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음.
- 그러나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지난해 마련한 대북 교통망 건설 계획안에는 원정리-라진 구간 고속도로를 2015년까지 완공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물동량 확대에 따라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임.
- 훈춘의 한 소식통은 “지난 1월 시험 운항한 훈춘-라진 루트 동해항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중앙 분리



대가 없는 왕복 2차로의 3급 도로 수준으로 정비되기 때문에 남방 운송 물량이 늘면 중국이 이 도로를 대체할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김계관 나흘째 베이징 체류..행적은 안 드러나(4/10)

- 지난 7일 중국을 찾은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이 방중 나흘째인 10일 현재 여전히 베이징(北京)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베이징의 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김 부상이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 부상은 도착 당일 저녁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 소재 국제구락부에 나타나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지난 2월 약속에 따라 방중했다”고 짧게 말하고서 그 이후에는 외부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 특히 숙소인 주중 북한대사관에서도 김 부상의 외출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음.
- 김 부상은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도착 직후 중국 측이 제공한 차량편으로 외교부로 이동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부상의 베이징 체류가 길어진 점으로 미뤄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추가 회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일각에서는 북·중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북한 측 ‘상부’의 훈령이 필요해 김 부상의 귀국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일 관계

● 독도특위, ‘日교과서 검정취소 결의안’ 채택 (4/4)

-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위원장 강창일)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짓고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일본 정부 측에 촉구했다.
-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행위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 간 선린우호 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결의안은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을 정부 측에 요구했음.
- 독도특위는 이와 함께 조만간 독도를 방문, 특위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독도 경비 및 관리 현황을 점검키로 했음.

● 정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착공키로 (4/4)

-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임.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4일 오전 개최한 한나라당과 긴급 간담회와 오후 국회 독도 영토수호대책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미리 보고한 자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음.
- 정부는 이번 달 육상에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구조물 제작에 착수한 뒤 2012년 12월까지 조립을 완료할 계획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독도 북서쪽 1km 해상에 건설되는 철골기지(연면적 약 2천700㎡, 사업비 430억 원)로 동해의 해양, 기상, 지진 및 환경 등을 관측할 장비를 갖추게 되고 평상시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임.
-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독도에 해수 통과가 가능한 방파제(길이 295m, 폭 20m) 건설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할 방침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방파제는 해수면에서 3m 높이로 설치되고 높이 55m의 전망대, 수중정원, 파력발전 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총 사업비는 4천74억 원임.
- 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오는 7월 완공 예정이었던 독도 주민숙소 공사를 5월 초까지 앞당겨 마무리할 예정임.
-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긴급 당정간담회에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특히 정 장관은 “울릉도 경비행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에 걸려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일반 사업과 달리 대일관계 등을 감안해 다시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주장에 “(예타를) 정책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음.
- 정부는 지난 1일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강조하는 학습 부교재를 발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고 앞으로 독도교육홍보관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독도 교육을 포함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 내 기본계획을 확정 하겠다”고 밝혔음.
- 또 독도의 국제적 홍보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의 러시아어 및 중국어 인터넷사이트를 개발하고 인터넷에 ‘동해 독도 표기오류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4월 중으로 일본 내 우익 교과서의 채택 저지를 목적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열 방침임.



- 이밖에 정부는 오는 7월까지 한·중·일 공동역사 부교재를 발간하고 8월에는 교사 120명과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독도 현장체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독도해양기지에 반발..한·일 긴장 고조 (4/5)

- 정부가 이달 중으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정면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일본 외무성의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사무차관은 5일 오후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과 방파제 건설 등 독도 내 시설물의 설치계획에 항의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음.
-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독도 시설물 설치에 대해 실무급에서 항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주일 한국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권 대사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로 필요에 따라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만큼 일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항의는 일본 국내의 보수층 여론을 의식한 행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정부의 새로운 독도 시설물 설치를 문제 삼아 국제 분쟁지역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교묘하게 독도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조치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우리 정부가 독도 앞바다에서 해류조사를 하자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출동시킨 바 있어 유사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일본의 이번 항의는 매뉴얼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양국 간 갈등이 지나치게 불거져서 독도문제가 국제 쟁점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설물 설치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한·일간의 이 같은 긴장고조는 양국관계의 다른 현안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일본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해 8·15 담화의 후속조치로 제시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반환▲사할린 한인 지원 ▲민간인 유골 봉환 문제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정부, 日 ‘방사능 오염수 방출’ 우려 전달(4/6)

- 정부는 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데 대해 공식 우려를 전달했음.
-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행위에 대한 국내의 불안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이날 오전 주일 대사관 참사관이 일본 외무성 경제국 정책과장을 방문해 우려를 전달한데서 한 단계 나아간 외교적 대응조치임.
- 이 자리에서 장 국장은 “오염수 방출 문제는 단순히 일본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인근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전에 통보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음.
- 장 국장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본 측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길이 없는 지를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음. 이에 대해 가네하라 총괄공사는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국 내의 언론보도를 통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음.
- 가네하라 공사는 이어 오염수 방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가네하라 공사는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협력 제안에 대해 “위험한 지역에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반적 차원의 협조라면 본부에 건의 하겠다”고 답변했음.
-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방사능 오염수 방출 현황을 브리핑하면서 “현재 후쿠시마 원전 2호기내의 지하수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며 “고농도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한시라도 시급히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외무성은 이어 “2호기 내에 있는 고농도 오염수를 옮겨서 저장할 시설로 집중폐기물 처리 탱크가 있다”며 “그러나 탱크 내에는 1만t 가량의 저농도 오염수가 있어 이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외무성은 “해수를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원전에서 약 30km 해역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도쿄전력은 원전 인근 지역을 검측하고 있다”며 “현재 모니터링 결과로는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日정부 “한국에 신속하게 정보제공 하겠다”(4/6)

- 일본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처음으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대해 설명했다.
- 6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은 한국대사관 실무자에게 이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신속한 정보제공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음.
- 일본 외무성은 “이번 오염수 유출은 긴급하게 이뤄져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상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부족했다”면서 “방출 직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피해가 있을 만큼의 초국경적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또 한국이 관심을 표명한 원자력 전문가 파견 접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입장을 통보 하겠다”고 말했다.
- 주일 한국대사관은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발표한 직후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출 개시의 시점, 방출량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국제법상의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혔음.
- 또 5일에는 외무성 관계자를 만나 한국 측의 우려 및 국제법상 문제를 전달하는 한편 신속한 정보제공과 원자력 전문가의 파견 접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내주 한·일 원전사고 전문가회의 개최(4/8)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사고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간 전문가 회의가 다음 주 열림.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일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원자력 전문가 파견을 제의해왔는데 일본 측이 우선 가급적 빠른 시일에 양국 간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다”고 말했다.
- 정부는 전날 밤 일본 주재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로부터 회의를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문가 회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갈 계획이며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 양국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회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을 비롯해 원자력 피해 상황과 대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 원전사고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일본 측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대해 “1차적 검토 결과 국제법상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 미·중 관계

● 시진핑, 미국에 ‘공정경쟁 환경’ 제공 촉구(4/7)

-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를 예약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중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라고 미국 정부에 포문을 열었다. 시 부주석은 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쓴 소리를 쏟아냈다.
-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덕에 지난 2009년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480억 달러로 세계 6위였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진출 기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 부주석은 “중국과 미국 경제는 서로 보완적이어서 양국이 서로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양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에너지, 환경, 첨단기술,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품 수출 제한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 시 부주석은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지난 1월 미국 방문하면서 중미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면서 양국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대화 및 상호 신뢰 강화, 상대의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 존중을 통해 더 큰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 부주석은 아울러 “폴슨 전 장관이 중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폴슨 전 장관은 오는 14~16일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열릴 보아오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다.
- 폴슨 전 장관은 지난해 보아오 포럼에서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와 함께 이사로 뽑혔음.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 출신 이사는 이들 둘 뿐임.

● “美, 대중 외교라인 교체..정책변화 가능성”(4/9)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 중국정책을 총괄해온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과 존 헨츠먼 주중대사 및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이임으로 중국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국제무대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전망했음.
- NYT는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백악관에서 중국정책을 총괄해온 베이더 NSC 보좌관이 브루킹스 연구소로 옮기고 후임으로 일본통인 다니엘 러셀 NSC 아시아담당 부보좌관이 내정됐다고 보도



- 하면서 이같이 전망했음.
- 베이더 보좌관은 지난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부터 중국문제에 관여해온 관리이고, 대만에서 모르몬교 선교사 활동을 했던 헨츠먼을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아이디어를 낸 중국 전문가임. 중국을 중시하면서도 주변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장본인이기도 함.
 - 또 국무부에서 중국문제에 집중해온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학계로 돌아가고, 후임으로 빌 번즈 정무차관이 내정된 가운데 일본통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또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 물러난 헨츠먼 대사의 후임으로는 게리 로크 상무장관이 내정된 상태임.
 -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라인 핵심 3인방의 교체 속에 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에 일본통일 러셀 부보좌관이 내정되고, 국무부에서 일본통일 캠벨 차관보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은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옛 친구들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백악관은 물론 중국정책은 토머스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통제·조정하는 만큼 큰 변화는 없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이례적으로 8번이나 만난 점은 오바마 정부의 중국중시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음.
 -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한 인터뷰에서 중국문제와 관련, “앞으로 여러 도전을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나은 기반 속에, 지역에 더욱 강력한 기반을 갖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가 직면한 도전 중에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 등 인권문제이며, 헨츠먼 대사도 지난 6일 이임연설에서 류샤오보(劉曉波)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됐다고 비난했음.

● 美 “캠벨, 북한문제 中과 논의”(4/9)

-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음. 국무부는 캠벨 차관보의 지난 7일 베이징 방문과 관련된 질문에 자료를 내고 “캠벨 차관보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양자관계 및 전략경제 대화 준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 국무부는 “캠벨 차관보는 또 중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했으며, 북한, 이란과 같은 역내 및 글로벌 안보 이슈들에 대한 협력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북한 문제



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전하지 않았음.

- 앞서 미 국무부는 캠벨 차관보가 같은 날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지 않았다고 전날 확인한 바 있음. 그러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캠벨 차관보를 만난 뒤 김 부상과 같은 날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입장이 북한에 간접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다. 미·일 관계

● 클린턴, 日 방문 예정(4/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를 당한 일본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7일 보도했음.
- 지지통신은 클린턴장관이 일본 지도자들과 회담하고 일본의 원전 사고 수습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 이 통신은 클린턴 장관이 오는 14일과 15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후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지난달 규모 9.0의 강진이 일본을 강타한 후 일본을 방문하는 두번째 외국 고위 관리가 됨.

● <日대지진> 미·일, 원전사고 대응 첫 합동 훈련(4/10)

- 미국이 일본 지원 작전의 중점을 재해 초기 인명 구조나 피해자 지원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으로 옮기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음. 주일미군은 9일 도쿄도(東京都) 훗사(福生)시 등지에 있는 미 공군 요코다(横田)기지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와 함께 원전사고를 상정해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했음.
- 이 훈련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파견된 미 해병대 전문부대 'CBIRF(Cheical Biological Incident Response Force)' 대원 145명과 육상자위대 중앙특수무기 방호대 6명이 참가했고,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음. CBIRF는 이달 초 일본으로 이동했고, 매일 일본 측과 비상사태 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 미국은 1995년 3월에 일어난 일본 옴진리교의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사건을 계기로 다음해(1996년) CBIRF를 창설했음. 이 부대가 방사성 물질이 퍼진 현장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날 훈련은 미군이 앞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대응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음.
- 미군은 그동안 최대 병력 1만8천명, 함선 20척, 항공기 140대를 투입해 센다이 공항이나 항만의 복구 작업, 물자 수송, 건물터미 철거 등



을 도왔음. 일본 측은 이 같은 미군의 지원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있음.

-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지난 4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을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보내 “미국을 친구로 둔 것이 이번처럼 든든한 적은 없었다”고 치하했고, 10일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巻)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미군 관계자에게 “대지진 발생 후 (미군의) 막대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음.

라. 중·일 관계

● 中외교부 “日 핵오염수 유출 우려”(4/08)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 1만여t을 태평양에 방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일본의 이웃국가로서 당연히 우려를 표시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기자의 서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이 같이 말했음.
- 즉각적 우려를 표명한 한국과 러시아에 비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던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홍 대변인은 “일본은 이미 중국에 정식 통보를 해왔다”면서도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음.
- 그는 “중국은 사태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이 적기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중국에 통보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